

위원회:유엔총회

의제: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개입 방안

후원국: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유엔총회,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인권의 보장과 증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억압 사례들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하며,

국제사회는 인권 보호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지니고 있기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협력하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의 합리적 해결을 목표로 이와 같이 결의하며:

1.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 a. 인권 침해란 기본적인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을 참고하되 자국의 국민이 인권침해라 인식한 경우를 말한다
 - i. 구체적인 예로 고문, 대량학살 등이 있다
 - b.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할 항목에 대해서:
 - i. 유엔 산하 조사단을 구성하여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지역을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1. 이에 대한 거부는 인권침해에 대한 전 세계의 집단 대응의 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다
 2. 산하 조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권력분립의 규칙에 입각하여 중립국, 적극 개입국, 소극 개입국에서 인원을 일정할당하여 선정한다

- ii. 조사의 결과는 유엔에 공식 보고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대응이 논의되어야 한다

2. 인권 침해 책임국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며:

- a. 제재 전, 권고를 통해 인권 침해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b. 경제적 제재는 이와 같다

- i. 수출과 수입을 제한한다
- ii.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무역 제재 등의 제재를 행한다
- iii.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제한한다

- c. 법률적 제재는 이와 같다

- i. 인권침해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또는 유엔의 적절한 기구에 회부할 것을 지지한다
- ii. 각국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 d. 군사적 제재는 이와 같다

- i. 외교적, 경제적 수단이 실패하고, 대량 학살이나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 유린이 지속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유엔의 승인 하에 군사적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

- 1. 군사적 개입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상임위원회국)이 모두 동의하고, 7일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a. 그 예로, 리비아 내전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73호를 근거로 NATO 와 함께 군사 작전에 참여하여 민간인 보호와 학살 방지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였다
- b. 그 예로, 코소보 분쟁 당시 세르비아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막기 위해 NATO 공습을 주도하였다

e. 외교적 제재는 이와 같다

i. 인권 유린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 반복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여 압박을 준다

1. 그 예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 문제에 대해, 미국은 유엔 무대에서 반복적으로 인권 상황을 문제 삼고 국제 사회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3. 국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며:

a. 인도적 지원

i. 피해 주민에게 긴급 식량, 의료, 주거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1. 제공은 유엔의 회원국들이 한다

ii. 주변국과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난민과 실향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b. 피해국의 회복 지원

i. 피해국이 법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 제도적 지원 수용 여부는 대상국이 결정한다

2. 국제사회에서 권력분립 원칙을 구축해야 한다

ii. 인권교육과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4. 디지털 시대에 맞춰 새로운 인권 위협을 고려하여:

a. 정보 통제, 디지털 감시, AI 기반 억압 등 신종 인권 사례에 대해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엔 산하 디지털 인권 감시기구 설립을 검토한다